

大學 기능의 多樣化 정책을 診斷한다

朴 星 來

(韓國外大 史學科)

1

韓國의 대학교육은 이제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 가 있다. 미국은 이미 국민의 반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는 고등교육의 일반화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지만, 한국의 대학교육은 앞으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는 '성숙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학교육은 몇 년 안으로 미국의 수준을 뛰어 넘어 일반화하는 단계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아는 것처럼 한국의 고등교육이 이렇게 靑의 팽창을 이룩하게 된 것은 1980년의 교육 개혁 조치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당시 亡國病으로까지 불릴 지경이었던 과외 공부와 재수생 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학원 소요 등을 해결하려는 뜻에서 시작된 1980년의 '7·30 교육 개혁'은 제 5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대체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과외는 날로 퍼지고 있어 머지않아 '80년의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의 졸업정원제도 없어진지 오래다. 당시의 개혁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틀림없이 지속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학 정원의 대폭적 증가이다.

그후 10년만에 우리는 다시 한국 고등교육의

일반화를 향한 일대 개혁을 1990년으로 전망하게끔 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 전담 방송국을 독립시켜 대학교육을 비롯한 각급 학교 방송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은 TV 방송을 통해 대학 학과목을 공부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를 받아 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한국은 TV 學士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교육 팽창 현상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일이다. 특히 1980년 17.2%에 이르고 있던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5년 35.1%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그 사이 양적 팽창으로 인한 무리한 부작용은 이루 예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다. 대학교육의 質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선 갑자기 늘어난 대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教授 요원이 급조되다시피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이의 교육의 低質化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1990년에 다시 우리는 TV 학사 제도의 도입으로 다시 파격적인 대학 팽창을 꾀하게 되었다. 10년 전의 경험을 되새겨 볼 때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다시 5년이 지난 1995년에는 1990년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1995년의 한국 고등교육 취학

물은 75% 이상이 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단연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2

이처럼 한국의 고등교육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고등교육의 고속 성장은 다름 아닌 그 질적 회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수의 부족으로 인한 질적 저하 이외에도 교실과 실험실의 부족 등 수 많은 문제들이 갑작스런 양적 팽창 때문에 대학교육의 수준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고등교육의 팽창은 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전국민에게 과급시켜 준다. 또한 갑자기 수 많은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그들이 취업할 자리는 만들어 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는 더욱 어려워만 가고, 이로 인한 대학 졸업자들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 대학의 양적 팽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한국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은 현대 사회의 특성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묘하게 결합되어 앞으로 도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사회가 대학교육의 팽창을 요구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대 사회는 전통 사회와 달리 정보화 사회다. 그리고 사회의 정보 의존도는 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가 경쟁을 이기고 살아 가기 위해서나 또는 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살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보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 나라의 교육 또는 한 개인의 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나라와 개인 사이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정도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및 개인간의 수준 차이를 크게 좌우할 것만은 너무나 분명하다.

게다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자주 연장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이와는 반대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날이 갈수록 가속되어 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미 절대 시간(평균 수명)에서 더 길어진 삶을, 상대 시간으로 치면 훨씬 길게 살아 가야 할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번지고 있는 것처럼 현대는 평생교육의 시대인 것이다.

여기에 한국인에게 특유한 그런 문화적 전통이 대학교육의 가속적 팽창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아직도 한국인의 핏속을 흐르고 있는 강한 유교적 전통이 학문의 탐구를 중시하고 교육의 확대를 환영한다. 이런 전통은 일제하에서 오히려 상승 효과를 얻어 강화되었다. 일제하에서 한국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을 통한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하에서 강화된 유교적인 교육 숭상의 풍조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 대학 졸업자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현격한 격차를 정당화시켜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사이의 社會的 差別은 한국 사회의 不平等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식의 변화를 통한 극복보다는 차라리 전 국민의 대학 졸업화를 시도하는 편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에서도 대학교육의 팽창은 불가피한 시대적 추세가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에 있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모든 지원자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는 일뿐이다.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학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될 때 한국의 대학 입시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여름을 한국 교육계는 전에 없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의 파동이 태풍보다 강한 타격을 전국에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중등교육의 전부가 대학 입시를 위한 규격화된 교육 현장의 모순에서 그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효율적인 遠隔 교육 방법을 대학교육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대학 입시로 멎든 우리 교육을 정

상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한국의 대학은 여러 가지의 개방교육 형태를 발전시켜 왔다. 1972년 시작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또 특히 서울 시내의 여러 대학은 다투듯 평생교육 기구를 두면서 대학교육을 사회의 각계 각층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준다. 특히 직장을 가진 젊은 여성을 상대로 시작된 이 대학교육 형태는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전공 분야 과목까지를 야간 특설 강좌 방식으로 이수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말 평가 등은 없지만, 강의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는 이미 대학 과목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평가 과정만 덧붙인다면 언제라도 학점 취득의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권이 근로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는 '노동자 대학'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의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간부 직원들에게 일반 대학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원 과정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강의 담당자가 일반 대학원의 그 분야 전공 교수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과정을 정식 대학원 과정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할 길을 찾고 있다. 또 사회 각 분야가 모두 재교육 내지 평생교육을 위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전국의 웬만한 기업체는 모두 사원들의 재교육 제도는 물론 건물 등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등장할 본격적인 원격 교육 체제에서 중요한 몫을 하게 될 수 있다. 또 이런 기존의 다양한 교육 수단을 어떻게 정식 대학교육으로 묶고 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느냐에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그러면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앞으로 일반화론까지 이어지고 이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교육 방송국을 새로 설치하는 등 원격 교육을 강화한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 것인가?

첫째로 원격 교육을 통한 대학교육이 어떤 형태로거나 다른 일반 대학교육과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와 TV를 통한 또는 그밖의 원격 교육을 통해 얻은 학사 학위가 等價로 여겨지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처럼 學閥이 존중되는 풍토에서 모든 대학의 학위를 똑같이 대접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우리는 대학간의 학위 수준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새로 원격 교육을 통한 학사 학위가 주어지게 될 경우 그 학위가 다른 일반 대학의 학위보다 '뚜렷하게' 열등하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 비슷한 제도에 의한 학위를 '敎養學士'로 부른다는 것은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처음 얼마 동안 시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반 대학과 똑같은 학위 명칭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격 교육의 결과에 대한 성적 평가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만 일반 대학과의 학점 교류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전공 과목의 수강을 일반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TV 대학의 권위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둘째로 TV 대학에서 펼쳐지는 강의 과목은 우선 교양 과목이나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펼쳐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 학문이나 전문 분야 가운데에도 인력의 수요가 아주 많은 분야만을 학과로 인정하여 전공 과목을 점차 개설해 가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일반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편입학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원격 교육의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일반 대학으로서도 앞으로는 점점 교양 과목 교육을 TV 대학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80년 이래 각 대학의 교양 과목 수강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많은 대단위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마다 한 반에 수백 명의 학생을 두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런 강의의 방법이나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대학마다 역사, 철학, 문학, 과학 등에 걸쳐 여러 대단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 과목은 차라리 TV 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케 하면 경비 절약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들 교양 과목이나 외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이 TV 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A대학의 교수가 TV 대학에서 한국사상사를 교양 과목으로 가르친다면, A대 학생으로서 그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TV 강의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할 일이다.

셋째로 객관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평가 방법을 채택할 일이다. TV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펼쳐지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은 평가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시험이 있다. 영어, 사회학 또는 과학사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칠 학생들을 모두 각각의 컴퓨터 앞에 앉힌 다음 중앙 통제실에서 같은 문제를 컴퓨터 스크린 위에 보여 주어 즉석에서 답을 쳐 넣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시험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준비하는 문제 은행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평가의 엄정성은 특히 원격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만 TV 대학은 그 권위를 세워갈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만 대학생의 질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능력에 따라 대학생은 학습 기간을 길게도 또는 짧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능력에 부치는 경우는 저절로 탈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일반 대학과의 학점 교류 또는 학점 인정이 가능할 것도 자명한 일이다. 또 엄정한 평가 제도를 통해 TV 대학은 고도의 선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나친 대학 졸업생 생산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보거나 또는 한국 사회의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으로 보거나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보거나 한국의 대학은 앞으로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료로 보아 한국의 대학 취학률은 2000년 쯤이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어차피 대학교육의 일반화가 우리 교육의 가까운 미래상이라면 하루 속히 이에 대처해 갈 배세를 갖추는 편이 현명할 것도 확실하다. 이런 뜻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TV 대학 등의 원격 고등교육 계획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대학교육의 일반화에 대해서는 많은 異論이 있다.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또 개인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마땅히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여 大學이란 말이 원래 나온 근원인 四畝 가운데 하나인 「大學」의 가르침처럼 대학은 당연히 大人之道를 지향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지적 능력'을 기르는 대학의 본래적인 사명을 저버리고 전문적 훈련소로 전락한 형편을 가슴 아파하는 지식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사회 불안의 가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기의 프랑스가 지식층의 증가로 인해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된 일도 있고, 실제로 불평하는 지식층을 壘産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 갈등 요소의 확대를 뜻하는 걱정거리인 것은 사실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대학 졸업자의 失職率이 아주 높아져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전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차츰 많아져 가고 있다. 앞으로 대학 졸업자의 실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국민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 10년 안으로 대학 지망생이 대폭 줄어들거나 중도 퇴학자가 많아져서 대학은 폐과와 통합의 소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일반화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걱정은 그리 타당한 것같지 않다. 우선 오늘의 大學을 사회의 진정한 지도층을 기르는 교육의 장소로 한정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발상 내지는 아주 낡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교양인을 기르지 못하게 되지 오래다. 대학이란 사회가 다양화하고 고도로 전문화함에 따라 그 각 부문에 필요한 기능적 지식인을 기르는 데 몰두하게끔 '타락'해 버린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해도 이미 시계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시계를 옛날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졸자의 실직 문제는 물론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대학교육을 위축시킬 정도로 대학 지망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언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짐작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 역시 앞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과 한국인 나름의 역사적 전통이 맞물려서 한국의 대학 지망률은 앞으로 계속 높아만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TV學位

제도는 한국의 고등교육의 亂亂와도 같은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이란 지나치게 誇示的이고 一時的인 것으로 그치는 일이 많았다. 이런 비판은 문교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 행정을 벌려 놓는 일이 많았다는 뜻이다.

사실 이번의 방송대학만 해도 이미 우리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격이 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방대학도 있어서 이 기존의 제도를 잘 지원·육성했다라면 이미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들이 오래 전에 정착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TV 학위란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면서도 다시 이번에도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가 미미한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규모로 이 제도를 시작하려 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송통신대학과 교육 방송을 연계시켜서 작은 규모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더욱 값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